



## 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과기정통부, 복지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
	아동학대 방지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과장 이승민, 사무관 방준희 (044-200-2296, 2299)
		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	팀장 정인호, 사무관 이관형 (044-202-3445, 3435)
	연구개발 특구혁신	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	과장 권기석, 사무관 상은혜 (044-200-2248, 2213)
과기정통부 지역연구진흥과		과장 김보열, 사무관 윤태량 (02-2110-2760, 2769)	

## 과학적 접근으로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

### <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>

- ▶ 사전예방-조기발견-신속대응·보호-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 보완
- ▶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(3월19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가동)

### <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>

- ▶ '강소특구(InnoTown) 모델' 도입, 규제샌드박스 방식 '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' 구축
- ▶ 기업·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, 정책펀드 2천억 이상 확대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: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」 과 「연구개발 특구 제도 혁신방안」 을 논의했습니다.

\* 참석 : 국무총리(주재),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법무부·행안부·산업부·복지부·고용부·여가부·국토부·중기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권익위원장, 경찰청장 등

## ◆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(복지부)

□ 정부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사전예방을 통해 아동학대를 줄여나가고,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이겠습니다.

○ 이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재점검하여, 아동학대사건\*의 '사전예방-조기발견-신속대응·보호-사후관리'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습니다.

\* 최근 고준희 양 학대치사 및 은폐, 엄마의 방화로 광주 삼남매 사망 등 발생('17.12)

□ (사전예방) 영·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\*을 실시하고, 아동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('18.하)하여 신고자를 적극 보호하겠습니다.

\* 양육수당·보육료·유아학비('18.6) 및 아동수당('18.9) 신청시 예방·신고 교육

□ (조기발견) 3월19일부터 전국적으로 'e아동행복지원시스템'\*을 본격 가동하여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·점검하겠습니다.

\* 장기결석,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 예측

□ (신속대응·보호)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\*에서 수행토록 하고, 보호기관-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,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\*\*하겠습니다.

\* 구체적인 형태는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'18년 말까지 결정

\*\* '19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(現 61개),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(現 59개) 신설

□ (사후관리)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여부,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보호 플랜을 마련하고, 가정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\*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\* 재학대 발생비율 : ('14) 10.2% → ('15) 10.6% → ('16) 8.5% → ('17) 8.17%

## ◆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(과기정통부)

□ 정부는 '지역 내 R&D 성과 → 지역기업 연계 → 지역경제 성장'의 선순환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특구\*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.

\* 현재 대전대덕('05.7), 광주('11.1), 대구('11.1), 부산('12.11), 전북('15.8) 등 5개지역

□ 먼저, 지정요건(연구소 40개, 대학 3개 이상)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,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'강소특구(InnoTown) 모델'을 도입\*하겠습니다.

\* '18년 상반기 안에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정비 완료

○ 다만,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,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신규 특구 면적에 대한 총량 관리제(20km<sup>2</sup>)를 도입 할 예정입니다.

○ 또한, 연구소, 대학 등 핵심기관의 역량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, 대상지의 특구 지정의 타당성, 발전 가능성 등을 지정 기준에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 할 예정입니다.

○ 아울러 강소특구가 국가혁신클러스터(산업부 추진중) 지정시 그 구성 요소로 기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또한,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·제품·서비스의 출시를 희망하는 신청자에게 임시적·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(규제 샌드박스 방식)를 제공하는 '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'을 구축\*하는 한편,

\*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8.9)

○ 연구소·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,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'19년까지 2,000억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
※ (별첨)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

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

분 야	과 제 명	소 관	추진일정
사전 예방 (8)	▣ 부모교육 강화		
	① 영유아 보육 부모 대상 부모교육 확대	복지부	'18.6월 ~
	② 취약가정 찾아가는 부모교육 확대	여가부	'18.3월 ~
	③ 이혼위기 가정 부모교육 참여	법무부	'18.하반기
	④ 부모교육 인프라 강화	여가부	'18.3월 ~
	▣ 아동인권 및 권리보장 강화		
	⑤ 성장기 인권·안전교육 강화	교육부	'18.3월 ~
	⑥ 학생 대상 아동학대 법·제도교육 강화	법무부	'18.3월 ~
⑦ 이혼소송 등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강화	법무부	'18.하반기	
조기 발견 (6)	▣ 신고의무자 보호 강화		
	⑧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에 포함, 적극적 보호	권익위	'18.하반기
	▣ 조기발견시스템 구축·시행		
	⑨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안전 확인	복지부	'18.3월 ~
	⑩ 위험변수 지속 발굴	복지부	'18.6월 ~
	▣ 지역네트워크 활용한 감시망 구축		
	⑪ 지역사회자원, 민간단체 통한 감시망 구축	복지부·행안부	'18.7월 ~
	⑫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홍보강화	복지부	'18.3월 ~
신속 대응 보호 (9)	▣ 학령기 아동 소재·안전 확인 제도화		
	⑬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 운영	경찰청·복지부	'18.11월
	⑭ 학교 요청에 따른 경찰 수사 강화	교육부·경찰청	'18.3월 ~
	▣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		
	⑮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확충	기재부	'19.상반기
	▣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		
	⑯ 아동보호전문기관 공공성 강화	기재부	'18.3월 ~
	⑰ 아동학대 관련 전담기구 검토	행안부	'18.4월 ~
	▣ 아동학대사건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		
	⑱ 아동학대사건 수사체계 전문성 강화	법무부	'18.3월 ~
⑲ 아동학대사건 업무협조 강화	경찰청	'18.5월 ~	
⑳ 수사경찰관 인센티브 확대	경찰청	'18.상반기	
㉑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및 운영내실화	경찰청	'19.상반기	
사후 관리 (4)	▣ 피해아동 의료·법률서비스 지원		
	㉒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·운영	복지부	'18.4월 ~
	㉓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및 국가비용부담	법무부	'18.4월 ~
	▣ 학대 피해아동 보호·지원		
	㉔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 사후보호플랜 마련	복지부	'18.4월 ~
	㉕ 학대피해아동 주기적 관리	복지부	'18.3월 ~
	▣ 재학대 방지 사후 관리		
㉖ 유관기관 간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정보공유	복지부	'18.4월 ~	
㉗ 보호시설 퇴소아동 관리 강화	복지부	'18.6월 ~	